

포용적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전략에 관한 연구

노규성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A study on Digital New deal Strategy for Inclusive Innovative Growth and Job Creation

KyooSung Noh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unm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조건으로써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한 방법으로 두 개념을 결합한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방법을 제시하였다. 추진방법으로써,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고 있는 기회를 살펴보고, 포용과 혁신을 결합한 성장 체계로써 디지털 뉴딜(Digital New-deal) 개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시장 창출, 공공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 정부주도의 하향식 혁신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의 필요성, 효과성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살펴보고, 일자리 창출이 포용과 혁신의 관점에서 갖는 의미를 토론했으며, 지속적인 효과 창출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포용성장, 혁신성장, 디지털 뉴딜

Abstract This study discussed 'inclusive growth', which recently has gained attention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preads, and considered innovative growth as a requirement for inclusive growth. Combining inclusiveness and innovativeness, a new concept of 'Digital New Deal' is suggested. Specifically, the new market creation strategy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of existing industries and public sectors, and solving social problems were presented. It also analyzed problems of the past government-led top-down innovation drive and suggested the "Hybrid" approach as a new way of promoting digital New Deal. Finally, we looked at the 'job creation' effect, discussed the meaning of it in terms of inclusiveness and innovativeness, and proposed a policy alternatives to create lasting effects.

Key Words : 4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Transformation, Inclusive Growth, Innovative Growth, Digital New-deal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for excellent writing materials by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center of Sunmoon University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 KyooSung Noh(ksnoh@sunmoon.ac.kr)

Received December 1, 2019

Revised December 28, 2019

Accepted January 20, 2020

Published January 28, 2020

1. 서론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사회 및 산업 각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VR/AR, 5G,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무인점포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변화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디지털 격차를 확대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또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1].

4차 산업혁명 이전까지의 디지털 격차는 기술 및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모든 것이 디지털 기술로 연결된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디지털 격차는 경제·사회·문화와의 단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소외에서부터 기업 간 격차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현재 사회전반에 도입되고 있는 무인시스템(키오스크)으로 인해 전체적인 서비스 제공 속도가 향상되었지만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들은 디지털 혁신 여부가 향후 기업성패에 직결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최신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조직내로 도입, 변화할 수 있었던 기업은 이를 활용한 타겟마케팅 등으로 경영 최적화 및 극대화를 이뤄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점점 도태되어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실상이다.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 및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00년 이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소수 기업의 생산성만이 빠르게 증가하는 생산성 격차의 확대 때문이고 디지털 혁명(격차)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비ICT 부문보다 ICT 부문에서 선도기업¹⁾이 비선도기업에 비해 더 빠르게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2].

이러한 생산성 격차 확대는 결국 경제활동으로 인한 혜택이 선도기업에 국한되는 승자독식의 폐해로 나타나고 있다. 승자독식 경쟁구조가 고착화·심화 된다면 특정 기업들의 생산성 및 시장점유 우위가 강화될 것이고 생산성 격차는 더욱 크게 확대된다. 노동자들의 임금도 선도 기업에게 집중되게 될 것이며 이는 일자리 기회의 불평등, 상대적 빈곤 악화, 교육·건강의 차별 등 다양한 양

극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 승자독식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포용성장이 제기되고 있다. 포용성장은 단순히 약자에게 복지를 제공하기보다는 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게 만들겠다는 개념이다[3]. 그러나 포용성장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존재한다. 개념적 측면에서의 불분명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실형적 측면에서도 목적이 불명확한 과업으로 이어져 경제성장 없는 비현실적인 일자리·복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4]. 최근에는 이를 보완한 대안으로서 포용적 혁신성장을 제안하고 있다²⁾. 본 논문에서는 이 포용적 혁신성장의 시행방안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는 포용성장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포용적 혁신성장에 대한 개념에 대해 다루고, 3장에서는 포용적 혁신성장의 실행방안으로써 제안하는 디지털 뉴딜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4장 결론에서는 디지털 뉴딜을 통한 포용적 혁신성장을 이룰 시 도출되는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

2.1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2.1.1 포용성장의 등장 배경

포용성장이 경제성장의 대안적 방안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주요했다. 기존 성장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였으며, 이전의 경제분석 모델이 현대 경제의 복잡성을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위기가 도래함을 직전까지 인지하지 못했으며, OECD를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에서조차 이 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후의 최대 경제위기로 꼽히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성장 전략, 즉 지속가능한 성장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재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에 세계적인 의견이 모이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불

2) 이러한 개념이 학계에서 풍부하게 논의되어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다만, 최근 문재인 정부는 포용성장의 원동력으로서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

1) 생산성 기준 상위 5%의 기업을 의미함

평등 문제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정치적 분열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며, 불평등 확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불평등의 완화가 좀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실증연구를 수행했다[5].

2.1.2 포용성장의 개념

전통적으로 경제적 이론에서 성장방식은 크게 외생적 성장과 내포적 성장방식으로 구분되었다[6]. 대부분의 개도국의 성장과정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대시키는 외생적 성장방식을 취했지만, 대부분의 생산요소가 활용되는 완전 고용 상황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는 혁신 등의 생산성 증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포용성장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포용성장에 대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에서는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 계층 간 형평성 있는 분배 등을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7].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경제기구에서도 성장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골자로 ‘속도와 방식’, ‘지속적인 경제적 기회의 확장’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덧붙이고 있다.

2.1.3 포용성장의 핵심 내용

포용성장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동등한 기회를 통한 불평등 완화이다. 즉, 소득의 재분배가 아닌 기회의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저소득 층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지금보다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했다. 이에 따른 경제발전의 결과물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미래 세대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것이 포용성장의 핵심 사상이다[8]. 세계은행에서도 기회의 평등, 시장 및 고용 전환에 대한 보호가 포용을 통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라 기술한다. 이는 기업과 개인이 시장과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공평한 규제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동등한 경쟁의 장에서 고용 기회를 확대해 경제규모를 키우는 것이 요점이라 할 수 있다[9].

2.1.4 포용성장의 한계

기존의 양적성장론의 부작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제시된 포용성장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행수단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는데 한계점이 있다[10]. 이는 포용성장이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바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분명함에서 기인한다. 삶의 질, 건강, 일자리, 지역사회, 환경 등의 진보적 정책은 전부 다 포용이라는 기치 아래 놓일 수 있고 이는 해석자의 믿음,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포용성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지역 간 불평등 및 격차의 해소를 중요한 핵심 가치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 지방정부의 과제였다. 만약 포용성장이라는 기조 하에 더 많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유행어(buzzword)가 되어 과거에 실패했거나 시행됐던 정책을 단순히 반복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포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선택·집중과는 대치되기 때문에 자원을 집중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따른다. 집중되지 않은 자원·에너지는 포용성장이라는 이름의 정책 아래 얹고 넓게 확산되어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너무 방대한 개념의 포용성장은 정치 유행어로 소비되어 중국에는 의미와 유용성을 모두 잃게 될 수 있다[11].

2.2 혁신성장(Innovative Growth)

2.2.1 슈페터의 혁신 이론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혁신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구적으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자는 슈페터다. 슈페터는 기업가에 의해 수행되는 신결합(new combination)과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자본주의 발전의 주요 동인으로 주목하였고, 이러한 혁신활동은 ① 신제품 개발, ② 프로세스 혁신, ③ 신시장 개척, ④ 새로운 중간재 공급원 발굴 및 ⑤ 새로운 조직 실현의 다섯 가지 방식을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는 기업가들이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동태적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기업의 생멸과 성쇠가 결정되는 이른바 ‘기업동학(firm dynamics)’이 발생한다는 것이 슈페터 혁신 이론의 요체다[12].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슈페터의 혁신 이론이 처음부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아니다. 정교한 수식으로 뒷받침

되지 못한 그의 주장은 오랜 기간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변방으로 취급받았으며, 오히려 기업 차원의 경영혁신 모델로 계승되어 근대 경영학 발전의 전기가 되었다. 그러나 기술변화를 외생적 변수로 보고 이에 크게 주목하지 않던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이 현실경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한계를 노출하자 주류 경제학에서도 연구개발과 혁신이 반영된 내생적 성장모형을 개발하여 슈페터의 혁신 이론을 받아들였다[13]. 한편 1992년 초판 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OECD의 오슬로 매뉴얼은 슈페터의 사상을 계승하여 혁신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혁신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14].

2.2.2 혁신성장의 개념

일국의 경제성장 관점에서 혁신성장의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주효했던 케인즈식 국가경제관리 시스템이 한계를 노출하면서 부터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적절히 혼용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즉각적으로 창출하여 경기변동성을 축소하고자 했으나, 1970년대에 경험한 두 차례의 오일 쇼크는 급격한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금융통화정책의 활용여지가 줄어들었고, 사회복지예산 증대에 따라 누적된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재정정책도 구사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들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의 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효율화하는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경제 구조개혁 정책에 주목하게 되었고, 1980년대에 일찍이 슈페터식 경제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했던 미국 경제의 부흥은 장기 경제침체의 늪에서 신음하던 많은 국가들의 지향점이 되었다[15].

슈페터의 혁신 이론에 따르면 동태적 경쟁에 직면한 기업가들은 혁신활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며, 그 속에서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전환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혁신활동은 신기술의 출현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신기술은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시장) 등 다른 유형의 혁신을 유발하며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 즉 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 및 기존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바로 혁신성장이다.

2.2.3 혁신성장 정책의 한계와 정부의 역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슈페터식 경제성장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기는 순탄치만은 않다. 케인즈식 경제정책은 즉각적인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뚜렷한 단기 정책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슈페터식 경제정책은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방식으로서 단시간 내에 정책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효과를 가늠하기도 어렵기에,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 등 주어진 시간 내에 정책성적을 평가받아야하는 정치사회 시스템 하에서는 장기 경제정책을 독심 있게 밀어붙이기 어렵기 때문이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이 지속가능한 경제성과 포용정책을 가능하게 하므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성장을 추동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생산요소를 신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창조적 파괴를 실행하도록 유도하고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기업이 R&D활동을 통해 생산한 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합당하게 보장해주는 동시에 새롭게 창출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에서 구현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3 포용적 혁신성장

2.3.1 포용적 혁신성장의 개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되었던 성장방정식이 점차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90년대 후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소위 '낙수효과'의 약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가 다각도에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사회에 상존하는 두 가지의 큰 실타래, 즉 신성장 전략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앞 절에서 서술한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개념을 혼합한 '포용적 혁신성장'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천명하였다.

우리정부가 주장하는 포용적 혁신성장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경제성장의 과실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슈페터가 주장한 창조적 기업가가 다양한 부문에서 배출되어 투입요소를 자유롭게 신결합하며 파괴적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경제구조를 전환하려는 중장기적 경제정책이라고 판단된다.

2.3.2 포용적 혁신성장의 원리

언뜻 보면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포용성장과 혁신

성장의 개념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스스로의 중간자적 역할을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기업가정신을 축소)하여 비효율을 낳고, 반대로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시장을 과신하여 방관하면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후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정부가 의도한 바와 같이 포용적 혁신성장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혁신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의 실현 및 시스템 구축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부(副), 성(性), 교육, 정보, 지역 등 다차원적 불평등이 혁신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혁신의 평등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 혁신생태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3. 포용적 혁신성장 방법론: 디지털 뉴딜

3.1 디지털 뉴딜의 개념

앞서 언급한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저성장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뉴딜정책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개념의 뉴딜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 케인즈 관점의 유효수요 이론에 따라서 추진된 뉴딜정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슈페터의 혁신성장 이론을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하이브리드형 뉴딜인 '디지털 뉴딜'을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대공황 시대의 뉴딜정책은 불황 타개를 위해 유효수요 확대를 유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었다. 뉴딜정책을 통해 당시 빈곤한 미국 남부 지역에 정부에 의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프라가 부족했던 테네시 강 유역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당시 미국의 GNP 증가율과 실업률이 회복세로 돌아서던 1930년대에 약 5.2%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였다[17]. 그러나 이와 같은 케인즈의 뉴딜 정책은 1960년대 후반부터 후발 주자들인 독일과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상승하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오래된 미국 경제의 호황으로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가

둔화되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더욱 하락하였고,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해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나타나며 실업률과 물가가 급등하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케인즈를 비판하는 신자유주의가 나타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 조세 감면, 규제 철폐, 공기업 민영화, 외국 투자유치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다른 경제 호황을 기대했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는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주도의 위기극복 이론인 케인즈가 다시 부상하고, 이와 동시에 혁신적인 기업가를 중시하는 혁신성장 이론을 주장한 슈페터의 '혁신성장 이론'이 부각되었다. 특히 혁신성장 이론을 토대로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투자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 중심적(investment-oriented)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혁신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청정에너지, 첨단차량기술, 보건 ICT, 21C 당면과제를 위한 과학 기술 등을 국가 혁신 전략의 4대 혁신 분야로 선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18]. 일본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응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7대 경제성장 실현 목표로 설정하여 경제재건 및 부흥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외 유럽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뉴딜로 혁신적인 성장을 선택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혁신성장은 모든 정부의 슬로건이 될 만큼 중요한 정책이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난 20년간 5년 마다 경제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현시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세계 주요국들의 혁신적인 뉴딜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서의 케인즈식 뉴딜과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이 제공하는 혁신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슈페터식 혁신 방안을 결합한 '디지털 뉴딜'을 경제성장의 중요한 정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뉴딜'은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과 슈페터의 '혁신성장 이론'을 접목한 이론적인 토대와 '디지털 기술'이라는 방법론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하이브리드형 뉴딜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 전략을 통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또한 지역과 소득 간 경제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성장 동력까지 만들어 포용적 혁신

성장을 이룩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3.2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뉴딜

현재까지의 디지털 정책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포용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개선 이슈가 존재한다. 과기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각 부처에 역할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19]. 그러나 각 부처의 정책들이 중복 되는 등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각종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개발, 플랫폼 비즈니스 등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탄생과 이로 인한 신시장의 확대를 위해 규제 혁신에 대한 요구는 높으나, 아직도 규제혁신의 속도가 미미하여 디지털 변화가 가져다주는 경제·사회적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개선 이슈로는 포용적 성장 관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미흡하여 아직 4차 산업혁명의 대응력이 부족한 지역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맹점이다. 따라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책추진 목적, 주체, 방식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추진 목적으로는 포용적 혁신 성장 달성을 목표로 하고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포용성장을 실현해야 한다. 특히 신시장 창출, 일자리 확대 등의 성과 창출, 양극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등이 대표적인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추진 영역 부분이다. 정책의 추진 영역을 지역 거점 및 산업 고도화로 맞추고 이를 위해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과 지역 특화 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역 거점의 신시장 창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책임성, 인과성, 지속성 확보로 지역의 균형성장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추진 방식 부분이다. 추진 방식은 과거의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닌 정부지원(Top-down), 민간 참여(Bottom-up) 방식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유효수요와 시장 혁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즉, 정부의 선제적 투자를 기반으로 시장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Table 1 참고).

3.3 디지털 뉴딜의 3대 전략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서 3개의 실행전략과 3개의 인프라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1.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olicies by Major Departments

Department	Major Polic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Value Creation of Data Resources ·Regulation Innovation for New Industry Revitalization ·Strengthening R&D Support System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reation of New Industries for 4IR ·Recovery of Vitality of Flagship Industry ·Strengthening Innovation Capabilities of SMEs ·Construction Local Innovation Bas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Utilization of AI and IoT Administrative Services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Using Big Data ·Lay the Foundation for Using Personal Information ·Creation of Public Leading Marke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Job Change Prediction and Survey ·Foste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alent ·Establish Social Safety Ne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reating Smart Connected Town ·AI and Big Data-Based Transportation Service Innovation ·IoT-based Proactive SOC Maintenanc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stablishing Regulation Sandbox for Fintech Activation ·Activating Financial Big Data

Source: Noh, (2018).

먼저 3대 실행 전략으로는 공공디지털 시장 창출, 기존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신시장 창출을 제시한다.

공공 디지털 시장 창출 전략에서는 지능형 행정 서비스 실현을 통한 전략과 서비스 전달 및 개발 방식 전환을 통한 전략을 들 수 있다. 기존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접목을 통한 퍼플오션(purple ocean)³⁾ 시장 및 일자리 창출,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 전략이 포함된다. 디지털 신시장 창출 전략으로는 지역 특화 및 민간 주도형 디지털 시장 창출과 기술 인큐베이션 강화를 통한 디지털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을 들 수 있다.

3.3.1 공공 디지털 신시장 창출

공공디지털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첫째, 행정시스템의 지능화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능형 행정 기반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행정혁신'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는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기술

3) 퍼플오션(purple ocean)이란, 홍콩의 컨설팅 회사 크라이 코어의 조 령 박사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기존 레드오션의 시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서 시장의 경쟁 방식, 내용, 대상이 달라지는 새로운 시장을 의미한다[20].

을 보유한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민간이 디지털 시장 창출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고지·핀테크 기반 지능형 세정 서비스 구축 사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45억 정도의 핀테크 신시장 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며, 공공 디지털 시장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환경, 안전, 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방식의 활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IoT 기반의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기반 사회취약계층 발굴, 돌보미 로봇 개발 등의 과제를 들 수 있다.

둘째, 공공 서비스 전달 및 개발 방식의 전환을 통해 공공디지털 시장을 창출 할 수 있다. 방식의 전환은 ‘소유·운영’ 방식에서 ‘구독·활용’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새로운 행정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부가 발주한 프로젝트에 민간이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민간이 행정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민간 주도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방식을 들 수 있고, 이를 민관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는 민원 앱 서비스 도입을 통한 민원접수의 디지털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3.3.2 기존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존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디지털 뉴딜 전략을 통해 디지털 퍼플오션(Purple Ocean) 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여기서 주력해야 할 첫 번째 전략으로는 기존의 전통 산업, 즉 자동차, 선박, 전기전자, 가전 등의 산업에서 퍼플오션 전략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 과제의 주요 대상은 각 지역별 기존 산업 기업체가 될 것이고, 방법으로는 기존 산업에 ‘새로운 고객 가치’를 융합하여 새로운 퍼플오션 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캐서 콤프레셔(KAESER KOMPRESSOREN)’로 독일의 공기 압축기 제조 중소기업을 들 수 있다. 이 기업은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조업체로, 서비스 차별화에 대한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판매에서 서비스 판매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여, 제품 판매량이 아닌 사용량에 따른 과금 모델(Per consumption)을 적용하였다[21].

둘째,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전략이 중요하다. 특히 사양산업인 섬유, 신발 등의 산업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신상품 개발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섬유 산업에서는 헬스 모니터링 기술이 접목된 웨어러블 직물 신제품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고, 신발 산업은 ‘건강’을 접목한 기능성 워킹화 제품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는 디지털 기반의 24시간 내 패션 관련 기획, 생산, 판매를 통합적(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클러스터 전체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각 골목시장 및 전통시장이 O2O 플랫폼, 비콘 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3.3 디지털 신시장 창출

디지털 신시장 창출은 지역 기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개념으로 무엇보다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으로는 지역특화 및 민간주도의 기술개발, 인큐베이션 강화를 통해 디지털 신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먼저 센서 및 비메모리 반도체 등 새로운 기술과 지역별 특화 산업을 연계해 ‘디지털 원천기술’과 관련된 지역의 새로운 시장 창출 전략을 들 수 있다. 이 전략에서는 특히 ‘원천 기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센서 기술과 같은 원천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지역의 특화 산업에 적용하기가 손쉽다는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민간 주도의 산·학·연 ‘응용 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응용기술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간 단계인 응용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산·학·연이 협동한 응용기술 R&D와 기술이 실현되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 거점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탑 러너(Top Runner)’ 방식으로 다른 부분에 전파,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전북, 경남의 조선업 지원 사례 등을 충남의 자동차 부품, 전남의 광센서 산업 등에 확산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 전략은 구매조건부 사업화 인큐베이션 강화를 통한 디지털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이다. 전국 지역에 '기술인큐베이션센터'를 확대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국 각 지역별 중소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핀테크, 블록체인 등 신기술 사업의 정부 구매조건부 지원, 유망 기술 기업의 생애주기별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전문가를 통한 지역 특화 기술사업화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부의 구매조건부 사업화 지원이 지역 산업 강화에 주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CONNECT 사업은 이를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기업 협의체를 운영하여, 기술 창업을 통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 내 최고 전문가에게 6~10 주 동안 무료로 제공받았다[22].

이상의 디지털 뉴딜의 3대 전략은 공공 시장의 디지털 전환·융합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산업 및 지역 산업 특화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포용적 성장인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기술인큐베이션을 통해 민간주도형 디지털 신시장 및 벤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3가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3.4 디지털 뉴딜 3대 인프라 전략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3대 인프라 전략으로는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을 들 수 있다.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시장 창출을 통한 데이터 관련 새로운 산업 및 시장을 육성하는 것과, 통합 국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전담 이행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다음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로는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 확대 및 네트워크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과 전국 무료 공공 네트워크 인프라 제공을 통한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인재 육성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디지털 교육체계 및 시스템 혁신을 통해 교육 디지털 관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3.4.1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

국가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이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가치 사슬의 주주기

에 걸쳐 협력과 혁신을 통한 데이터 신 서비스인 유통·거래·가공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30대 주요 업종 기업들이 협력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투입과 데이터 규제 개혁,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통해 데이터 공급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부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의 거래 및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활용 혁신 서비스 모델 발굴과 지원 등으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및 혁신 서비스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통합적인 국가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 이행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먼저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통해 데이터 신시장 및 혁신의 가속화를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전담 이행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총리실 산하 '민관합동 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로 부처 간 이해를 조정하여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추진으로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점에서 주요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다른 방안으로는 정부 부처로 '데이터청'을 신설하여 데이터 산업 및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다. 제안하는 부처에서는 데이터 산업 육성 및 데이터 규제 지원, 전국민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발굴 및 추진 등을 주요 기능으로 가진다.

3.4.2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 전략은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디지털 신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 확대 및 네트워크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 5G, 10기가 인터넷, IoT 전용망 전국 조기 구축 및 확대를 통해 디지털 네트워크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네트워크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세제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5G 음영지역을 완전 해소하는 과제로 인구 밀집지역을 포함한 전국 단위 기지국을 설치하고, 10기가 인터넷 속도 현실화를 위해 세제, 금융, 보안 등 규제 개선 및 정부 주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IoT 전용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IoT 생태계 활성화 및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전용망 보급

가속화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전국 무료 공공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공공 네트워크 관련 새로운 시장 창출과 정보 소외 지역 해소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전국 단위의 중계기 보급, 1Gbps 초고속 무료 Wi-Fi 전국망 구축 등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합동추진방식이 중요하며 이는 뉴욕 '링크 NYC'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하는 것도 추천해 볼 수 있다. 뉴욕의 '링크 NYC' 사업은 2024년까지 반경 50m 내 사용 가능한 무료 Wi-Fi 중계기 7,500대 설치 목표로 하는 지역단위의 산업이며, 이를 통해 민원, 재난상황, 건물안전 관리 등 사회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스마트 시티 구현, 빅데이터 수집, 디지털 서비스 격차 해소 등의 다양한 기대효과 추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뉴욕시와 학교, 민간단체가 모두 협동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혜택을 제공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23].

3.4.3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디지털 뉴딜을 위한 3대 인프라 전략의 마지막은 디지털 혁신인재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혁신인재 육성과 인재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능정보화 10대 핵심 기술(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영역별 산업 맞춤형 교육시장 육성을 통해 전국 각 지역별, 지역특화 산업별 핵심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바우처 등을 활용한 민간(대학, 산업)시장이 주도한 취업 연계형 교육과 산업별 특화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이를 위한 교육 장소로 지역의 공실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육성된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탤런트뱅크(Digital Talent Bank)와 같은 조직을 설립하여 육성된 인재를 지역 중소기업과 일자리 매칭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래 디지털 교육체계 구축 및 시스템 혁신을 통한 교육 디지털 신시장 창출 방안이다. 차세대 '스마트 학교' 보급 확대를 목표로 전국 광역시, 시·군·구 단위의 시범학교 추진 후 전국으로 확대 보급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교육 디지털 시장 초기 형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 발주-민간 참여' 형식으로 신속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스마트 학교' 확산을 위한 시범학교 확대 또한 중요하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형 에듀24(소프트웨어 전문 교육 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민간이 주도하여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에 소재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지만, 이를 확대하여 정부 지원 하에 운영하고, 향후 민간이 주도하여 이를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디지털 뉴딜의 3대 인프라 전략을 디지털 뉴딜의 3대 실행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전략으로 이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모든 전략이 정부가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며 이와 관련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4. 연구 논의

본 연구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던 분배론적 관점 및 혁신론적 관점에 대한 이분적 시각을 지양하고 통합적인 경제성장의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전통적으로 분배적 관점에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24], 혁신적 관점에서는 시장 특히 기업을 혁신의 주체로 강조하였으나[25], 디지털 시대에는 하이브리드형 뉴딜의 추진을 위해서 상호 보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연구가 실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를 창출할 것인가는 여전히 연구과제로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이 실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되고 있고, 그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후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정부지원, 민간주도의 PP 방식이 실질적으로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며, 제시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와, 어떤 정책들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논의(AHP 방식 등)를 통해 전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5. 결론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포용성장과 포용 성장을 위한 조건으로써 혁신성장의 필요성으로 고찰하였다. 두 가지 개념의 경제성장 이

론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두 개념을 연결하는 이론적 토대와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시한 포용적 혁신성장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임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기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여가 있다고 생각된다.

‘디지털 뉴딜’은 포용적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전략이다.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3대 추진 전략과 3대 인프라 전략을 제시하였다. 3대 추진 전략으로는 먼저 공공디지털 신시장 창출을 위한 행정시스템 지능화, 공공 서비스 전달 및 개발 방식의 전환 전략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제로는 디지털 뉴딜 전략을 통한 퍼플오션 시장 및 일자리 창출,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디지털 신시장 창출 전략으로 구체적인 과제로 지역 특화 및 민간주도의 기술개발 강화, 구매조건부 산업화 및 인큐베이션 강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3대 인프라 전략으로는 국가데이터 기반 구축,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전략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뉴딜’ 전략의 주요 핵심은 추진 방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된 전략과 과제들을 추진할 때 정부의 ‘소유·운영’ 방식에서 ‘구독·활용’의 방식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PPP 방식으로서 사업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 방식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뉴딜’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이룩하고 장기적인 저성장에서 탈피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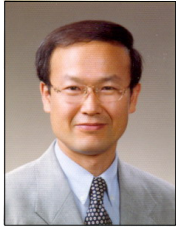
REFERENCES

- [1] Y. I. Jo, G. J. Song, N. K. Kim & S. J. Kang. (2017). *Research of master plan strategy for ICT paradigm shift and information gap*, Kyounggido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2] The Bank of Korea. (2018). *Background of the productivity gap between korean firms and implications for total productivity and wage gap*, Bank of Korea. <https://www.bok.or.kr>
- [3]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2019. Sept.). *KOSTAT Statistics Plus*, KOSTAT Statistics plus. <http://sri.kostat.go.kr>
- [4] D. Burch, N. McInroy. (2018). *We need an inclusive economy not inclusive growth*, Manchester: CLES.
- [5] OECD. (2014). *Focus on inequality and growth*, Paris : OECD.
- [6] J. Heo. (2016. Apr.). OECD Issue. *National Economy*, KDI, 68-70.
- [7] OECD. (2015).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Paris : OECD.
- [8] IMF. (2018). *IMF Annual Report 2018*, Washington : IMF.
- [9] World Bank. (2019). *What is inclusive growth?*, Washington : World Bank.
- [10] M. D. Woo. (2018). Role of local finance for inclusive growth. *The Korean Association of Local Finance*, 121-146.
- [11] N. Lee. (2019). Inclusive growth in cities: a sympathetic critique. *Regional Studies*, 53(3), 424-434. DOI: 10.1080/00343404.2018.1476753
- [12] J. A. Schumpeter.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 [13] K. Lee. (2014). *Recreating economics of catch-up*, Seoul : Orebooks.
- [14] OECD and Eurostat. (2005). *Oslo manual: guidelines for collecting and interpreting innovation data 3rd edition*, Paris : OECD. DOI: <https://doi.org/10.1787/19900414>
- [15] Y. K. Byun. (2017). *Transition of economic philosophy*, Seoul: Badabooks.
- [16] H. Yoshikawa. (2009). *Schumpeter vs. Keynes*, Seoul : Sejongbooks.
- [17] K. Y. Jo. (2017). *Lessons from the New Deal*, KERI Column. www.keri.org
- [18] J. K. Kim, N. S. Kwon, J. M. Jang, S. H. Lee & S. Y. No. (2016). *Digital innovation and policy challenges: focused on major countries' cases and their implications*, Sejong : KIEP
- [19] K. S. Noh. (2019. May). Digital New Deal for inclusive and innovation growth. *Digital New Deal Forum*.
- [20] H. J. In. (2009). *Purple ocean strategy*, Paju : Beautiful people.
- [21] J. H. Na & D. R. Choi. (2016). *Strategy for smart factory: US, Germany, Japan*.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http://www.lgeri.com/>
- [22] S. N. Kim. (2016). *US technology transfer case and technology valuation trends*, Daejeon: KISTI.
- [23] K. Y. Kim. (2017). *US smart city policy and implications*, Korea Development Bank. www.rd.kdb.co.kr
- [24] W. J. Lee. (2016). Going beyond growth topography to an inclusive economy. *Hwanghae Review*, 8-26.

- [25] J. W. Lee, C. S. Song & S. J. Kim. (2018). Principle of innovative growth and start-up finance: econ 101 of innovative growth and effective ecosystem for start-up finance. *Korean Economy Forum*, 11(3), 1-39.

노 규 성(Kyoo-Sung Noh)

[종신회원]



- 1984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 1984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과(경영정보학석사)
- 1995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과(경영학박사)
- 1987년 9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경영

학과 교수

- 2018년 2월 ~ 현재 :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 관심분야 : 경영정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정책
- E-Mail : ksnoh@sunmoon.ac.kr